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022년 12월 23일(금) 14:30
한국방송회관 회견장(YouTube 생중계)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022년 12월 23일(금) 14:30
한국방송회관 회견장(YouTube 생중계)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 개 요

- 일시 : 2022년 12월 23일(금) 14:30
- 장소 : 한국방송회관 회견장(YouTube 생중계)
- 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최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일 정

사회: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장)

시 간	내 용
14:00 ~ 14:30	등록 및 접수 사전 등록 현장 참석자 안내 / 온라인 참석자 YouTube 접속
14:30 ~ 14:40	인 사 말 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4:40 ~ 15:00	주 제 발 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발표 김성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
15:00 ~ 16:00	패널토론 및 종합토론
	좌 장 하형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패 널 토 론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성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윤선재 (청소년특별회의 의장) 이미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회장) 이익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의회 회장) 조아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16:00 ~ 16:30	종 합 토 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30	폐 회

C O N T E N T S

주제발표

○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발표

김성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	1
--------------------------	---

패널토론

•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75
• 유성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79
• 윤선재 (청소년특별회의 의장).....	85
• 이미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회장).....	89
• 이익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의회 회장).....	93
• 조아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97

주제발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발표

김 성 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022.12.23.(금)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안) [2023-2027]

2022. 12. 23

동 계획(안)은 공청회용으로
추후 의견수렴 및 보완 등 거쳐
수정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합동



목 차



I. 수립 배경 및 경과	1
II. 청소년정책 환경변화	3
III. 제6차 기본계획 평가	8
1. 주요성과	9
2. 한계 및 향후 과제	12
IV. 추진 방향	14
1. 수립 방향	15
2. 비전 및 목표	16
V. 정책 과제	17
1. (활동)청소년 역량강화 및 성장지원	18
2. (복지)촉촉한 청소년 지원망 강화	31
3. (보호)청소년 보호체계의 대응력 제고	44
4. (추진기반)정책 추진기반 재구조화	58

I . 수립 배경 및 경과

1

수립 배경

-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15조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제1차 기본계획('93~'97), 제6차 기본계획('18~'22) 등

- 그동안의 청소년 정책 추진 성과를 기반으로 **최근 사회환경 변화, 새로운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하여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3~'27) 수립 필요

◆ 「청소년기본법」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추진 경과 및 계획

-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실시('22.4~12)
 - 분과별 TF 구성·운영 통해 과제 발굴, 간담회·토론회·서면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진행
- 청소년 정책 분야별 주요 대책 및 계획 등 수립·발표
 - *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2.6), '학교안팎 청소년 지원강화대책'('22.10),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방안'('22.11)
-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안) 초안 마련 및 관계기관 1차 의견 수렴('22.12)
- 기본계획 수립 관련 공청회 개최('22.12.23)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대상 추가 의견수렴('22.12~'23.1 예정)
-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의결,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발표('23.2 예정)

II . 청소년정책 환경변화

1

청소년 정책 환경 변화

1

청소년 특성 변화

◆ 청소년 규모감소와 더불어 청소년 인식 등 특성도 함께 변화

□ [인구] 청소년 규모는 지속 감소, 위기청소년 규모는 증가 추세

- (청소년 인구) 우리사회는 2000년대 이후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하였으며, 청소년인구 규모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인구소멸도 가속화

* 전체 인구 대비 청소년 비중 감소: (1980년) 36.8% → (2022년) 15.8%

- (특성별 규모)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은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 다문화 청소년의 규모와 비중은 지속 증가 추세

* 가정 밖 청소년(가출신고 기준 9-19세) : ('19년) 23,783명 → ('20년) 20,875명 → ('21년) 23,133명



청소년 규모 감소에 따라 개개인의 역량 및 역할 중요성 증대,
청소년 특성별 맞춤형 복지 수요 확산

□ [특성] 청소년 세대는 디지털 친화도가 높고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건강문제 등 어려움도 증가

- (디지털 친화) 현 청소년 세대는 디지털과 함께 성장하여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세대*이며, 관련 온라인 활동 및 기기 활용에도 능숙

*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 디지털 활용 환경에서 성장하여 일상생활 전반에서 디지털 및 온라인을 활용하고, 관련 기기 사용에도 능숙한 세대

- 디지털 친화 특성으로 관련 교육·활동에 대한 수요도 증가

- **(욕구 다양화)** 청소년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참여활동 관심도·욕구 증가**
 - 분야별로는 **문화·예술, 모험·개척** 등에 대한 수요가 높고 **디지털 확산** 등에 따라 **과학·정보 관련** 분야 관심도도 **지속 높아지는 상황**
- **(건강문제 심화)** 최근 청소년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등 건강 전반 문제 야기
 - 아침식사 결식률 증가 등 **식생활 습관**이 나빠지고, **비만을 증가**, **신체활동 시간 감소** 등 변화
 -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정서상 문제 확산으로 **우울증 진료, 불안장애 진료가 증가***
 - * 우 울 증 : ('19년) 33,536건 → ('21년) 39,868건(18.9% ↑)
 - 불안장애 : ('19년) 16,895건 → ('21년) 23,590건(39.6% ↑)
- **(근로청소년 처우문제)** 청소년 근로시장 관련, 주 근로형태 특성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행위로 보호 사각지대 잔존**
 - * 2020년 기준 청소년 임금근로자 중 71.6%가 비정규직, 전체 중 30% 가량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보호 사각지대 우려(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디지털 친화적인 청소년 특성과 활동 욕구 증가 등 대응하여 관련 프로그램 다변화 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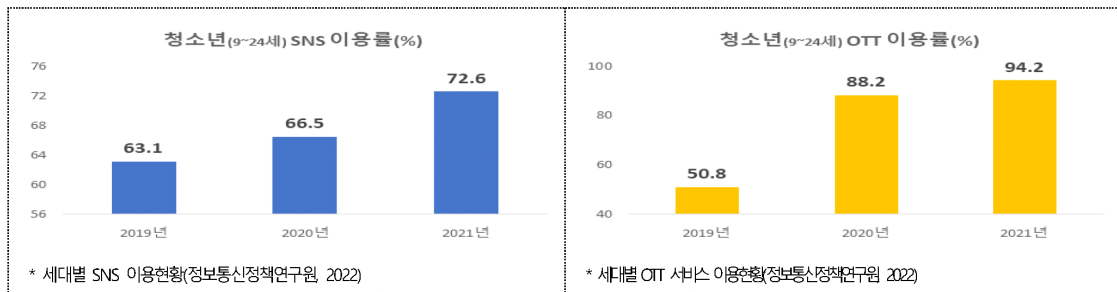
2 청소년을 둘러싼 제반여건 변화

◆ 다양한 사회변화로 청소년이 직면한 기회와 위기 모두 증가

- **[기술 발전 디지털 확산으로 청소년 행태 변화와 함께 다양한 부작용도 야기]**
 - **(디지털 확산)** 신기술 발전,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사회 전반에 **디지털 중심 문화가 크게 확산**

- 디지털 확산은 산업구조와 일자리 구조를 다양화하고, 일상생활 속 블록체인·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시키는 변화 야기

- (디지털 활용 증대) 디지털 중심 환경 속 청소년들의 디지털 매체 이용 및 활용률은 매우 높은 수준



- 일상생활부터 교육, 소통 등 삶 전반에서 디지털 활용도가 높아져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윤리 등 중요성도 증대

* 디지털 환경에서 각각의 정보 형태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문해능력

- (디지털 확산 부작용) 디지털 매체 환경이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이용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미디어 과의존 등 부작용 및 유해환경 노출 또한 증가
- (근로형태의 다양화) 기술 발전 등으로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통상적인 근로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근로 형태(Gig Worker 등)*가 출현 및 확산
- 청소년 또한 新근로시장에 진입 중

* (Gig Worker) 디지털 플랫폼을 주요 기반으로 하여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일회성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 **디지털 확산에 따른 활용능력 제고와 더불어 관련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보호방안 강화 필요**

□ [코로나19]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삶의 방식과 사회 전반에 변화 발생

- (비대면 활성화) 코로나19로 확산된 비대면 수요·활용도 증가로 기존 청소년 관련 대면 서비스의 비대면 전환이 확산
- (일자리 위기 등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경제 충격이 청소년들에게도 큰 타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취약청소년의 위기 심화 우려
 - 더불어 등교 중단, 비대면 원격교육 확대 등으로 청소년 간 학습 격차·디지털 격차도 야기

☞ 비대면수요 확산에 따른 정책추진방식 전환, 취약 청소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자립지원 등 수요 확대

□ [기후변화 등] 기후변화 등 위기 심화로 적극 대응 필요성 확산

-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이에 각종 정책 수립·추진 시 기후변화 대응 기조가 강화
 - * 현재 기후변화 흐름에 따르면 세기말(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최대 2.6℃ 상승 예상(UNEP(유엔환경기구) 2022 배출 갭 보고서)
- 기후변화에 따라 그린산업 등 신기술·산업분야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역량 제고 및 일상에서의 환경 실천 필요성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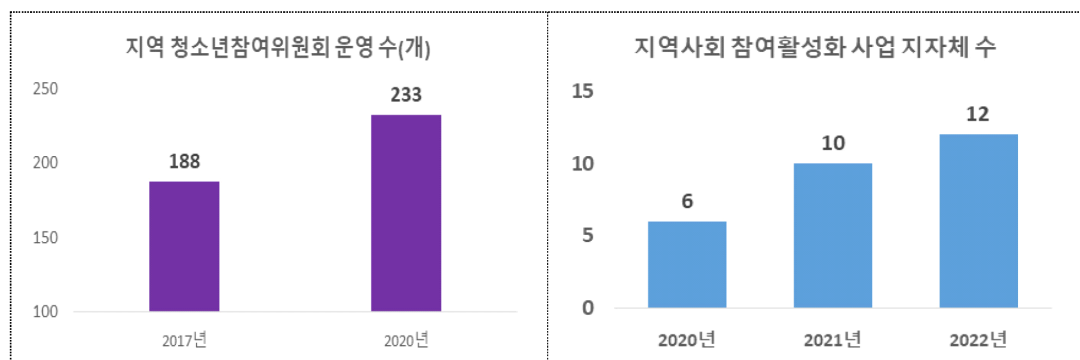
☞ 기후변화 등 사회이슈에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확대, 관련 사회여건 변화에의 대응력 제고

Ⅲ. 제6차 기본계획 평가

1 그 간의 주요 성과

□ (활동) 다양한 청소년활동 확산 및 안전한 체험활동 기반 조성

-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전국 확대,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개최 및 세계잼버리 개최 추진* 등 다양한 분야 및 **글로벌 중심 활동 활성화**
 - * 「세계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세계잼버리 종합추진계획」 마련('18.12월) 등
- 방과후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진로맞춤형·역량개발 관련 체험활동 기반 강화**
 - * '창의융합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적용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신규모델 개발·운영('18년 10개소)
- 수련시설 대상 전문 안전점검 실시 및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여 **안전한 활동공간 마련** 및 활동인프라 확대로 청소년의 **활동 접근성 제고**** 노력
 -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운영 종합시스템(YSMS) 개발 추진
 - ** 생활권 활동시설 확대 : ('17) 453개소→('19) 491개소→('21) 523개소
전문화·특성화된 국립청소년활동시설 건립 추진(미래환경센터(경북 봉화, '22.7 개원)
-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참여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활성화 사업 운영 등 **지역 단위 참여활동기반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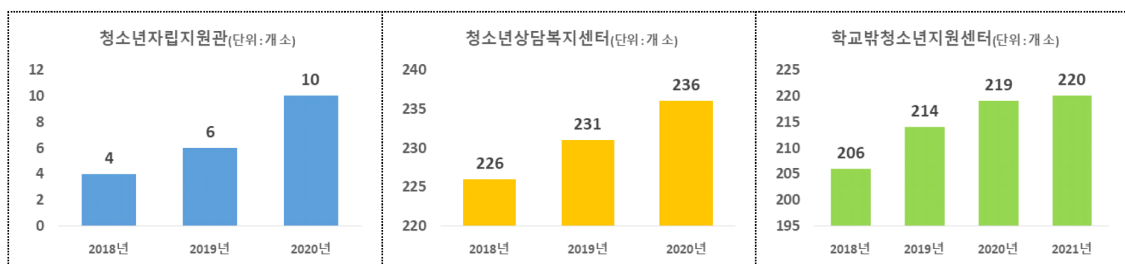
□ (복지) 위기청소년 지원기반 강화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 관계부처 합동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 마련('19.5),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신규 도입·확대*로 정책 협업체계 강화

* 위기청소년 발굴·관리 및 고위기 사례관리('19년 5개소 시범 → '20년 9개소 → '22년 20개소)

-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실태파악 제도 마련·확대*, 보호·지원 기관 등 인프라 확충 등 정책 접근성 제고

* 거리상담(아웃리치) 전문요원 배치 확대('18년 60명 → '20년 115명),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 최초 실시('22.4 결과 발표) 등



- 쉼터퇴소 청소년 주거지원 근거 마련 및 자립지원수당 지급(21~) 등 자립기반 확대

* 쉼터퇴소 청소년들이 청년임대주택에 우선 입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19.7 개정, '19.10 시행)

- 늘어나는 청소년 자살 시도 및 자살률 증가 등에 대비하여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마련·발표('22.11)

- 학교 밖 청소년 무료급식 지원, 청소년생활기록부 도입, 전용공간 조성 등 지원서비스 확충하여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등 성과 증가

- 의무교육단계(초·중)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사전동의 없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사각지대 해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1.3)

□ (보호)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 및 보호처분 대상자 맞춤형 지원

- 청소년 보호법 이행여부 및 청소년 유해성 사이트(랜덤채팅, 유해업소 홍보 등) 점검 및 시정·차단요청을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 확산**
-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발굴 및 치유지원 강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을 통해 보호처분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회복지원 내실화**
 -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129만여 명 대상) 및 위험군 대상 치유캠프 등 진행
 - ** 부산(5), 광주(2), 대전(2), 울산(1), 경기(1), 충남(1), 경남(6), 제주(2) 등 총 20개소

□ (추진기반) 유관부처·지자체와의 협업 및 추진체계 개편 추진

-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발표*** 및 **지자체, 교육청과의 MOU 체결** 등 협업체계 구축
 - *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수립·발표('22.10.6)
- 청소년데이터맵 구축, 청소년사업 디지털전환 교육과정 개발 등 **청소년 정책·사업의 디지털화 추진**
- 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담조직·전담 공무원**을 확대하고, '청소년정책 분석·평가'를 **매년 전체 지자체(228개)**로 확대·개편하여 지역중심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18.12)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토록 하여 참여권 보장 확대**

2

평가 및 향후 과제(2018~2022)

- (활동) 최근 급변하는 사회 여건과 수요 등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활동프로그램·시설운영 다변화 등 필요성 증대**
 - 청소년 규모 감소와 코로나19로 **청소년 활동 관련 시설 수요·이용률 감소** 추세,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지자체의 역할 확대**
 - 기후환경 변화 등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청소년들이 직접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요구 증가
 - 청소년 참여활동이 ‘청소년참여기구’에 대부분 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기구에 대한 **인지도·참여도마저 낮은 상황**

☞ **여건변화 및 수요 대응을 위한 활동프로그램 및 참여기제 개편, 활동 인프라 수요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 (복지) 지속적인 지원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책 사각지대·대상 간 지원 격차 잔존, 새로운 위기유행 대두**
 - 발굴·보호 중심의 정책지원에서 청소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립까지 책임지는 **종합 지원체계 필요성 제기**
 - 고등학교 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연계제도 미흡 및 학업중단 시 정보 부족** 등 문제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 발생
 - *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둘 당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비율은 41.8%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청소년의 위기단계·수준별 특성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망 구축과 인프라 확충 등 통해 지원 공백 및 격차 해소**

□ (보호) 유해환경 매개체 확산, 근로시장 변화 등 청소년의 위험 환경 노출 증가로 **보호망 확충** 등 적극 대응 필요

- 청소년의 디지털 매개체(OTT 등) 이용 증가, 온라인 유해약물 유통 증가 등 **청소년 유해환경 확산 및 노출 증대**
- 청소년 대상 **범죄 및 유해행위(유인행위 포함) 증가**
- 新근로시장에의 신규진입에 따른 새로운 보호체계 마련 필요

☞ **유해환경 및 범죄 등 관련 보호체계 강화와 노출 차단,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보호체계 마련**

□ (추진기반) 추진체계 개선 및 지역·현장 중심 청소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 및 실효성 미흡**

- 청소년 정책 추진 관련 **인프라 정비, 자원 확보 등 기반 미흡**
- 청소년정책이 실제로 작동되는 지역 차원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낮은 관심도, 협업 부족** 등으로 **현장 체감도가 낮은 상황**
- 정책대상의 주체성 확립을 위해 관련 권리 보장과 정책 추진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대표성 확보 필요성 증대**

☞ **정책 제도·자원·인프라 등 체계 전반을 재구조화하고, 지역 내 청소년 정책 확산과 내실있는 작동 위한 협업 강화**

IV. 추진 방향

1

수립 방향

□ [기본방향] 현재의 주인공으로서의 청소년 성장을 함께하는 기본계획

- 기존 미래세대라는 관점 중심으로 다뤄진 청소년을 넘어 현재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기본계획 수립
- 정부 국정비전인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기조에 따라 신 소외 대상 발굴 등 정책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 추진

□ [추진전략] 변화에 시의성 높게 대응하고 청소년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추진

- (활동) 사회의 디지털화와 연계하여 청소년의 역량제고 등 지원 강화 및 활동기반을 용이하게 개편,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활동분야의 다양성 강화
- (복지) 위기청소년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자립지원 확대, 새로운 위기 심화에 대응하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지원체계 내실화 및 고도화
- (보호) 新 유해매체 등 유해요소·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망을 강화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친화적 환경 조성
- (추진기반) 청소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정책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고 현장감 제고를 위한 지역 중심의 청소년 정책 활성화, 청소년 주체성 확립 위해 정책추진 전반에 권리보장 및 대표성 강화

2

비전 및 목표(안)

비전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청소년, 현재와 미래를 주도하는 청소년

목표

- 스스로 삶을 주도하는 역량 있는 청소년 지원
-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정책
영역

및

중점
과제

활동

1. 청소년 역량강화 및 성장지원

- 1-1. 분야별 청소년활동 다변화
- 1-2. 청소년활동 연계 강화 및 공간 혁신
- 1-3. 청소년활동의 재구조화



복지

2. 촘촘한 청소년 자원망 강화

- 2-1. 차별과 배제 없는 청소년 지원
- 2-2. 청소년 특성별 자립 지원
- 2-3. 청소년 복지지원 인프라 개편



보호

3. 청소년 보호체계 대응력 제고

- 3-1. 新 유해환경 내
청소년 보호망 강화
- 3-2. 유해행위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 3-3. 청소년 근로보호 강화
- 3-4. 청소년 보호망 강화를
위한 환경 개선



추진기반

4.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재구조화

- 4-1.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 체계화
- 4-2. 지역 중심의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강화
- 4-3. 청소년 권리강화 기반 구축

V . 정책 과제(안)

1 [활동] 청소년 역량강화 및 성장지원

1-1. 분야별 청소년 활동 다변화

- ①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활동 강화
- ② 청소년 수요맞춤형 진로지원
- ③ 테마별 자기주도형 청소년활동 활성화
- ④ 청소년 자치 및 정책참여 활동 확대

1-2. 청소년활동 연계 강화 및 공간 혁신

- ① 학교-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청소년활동 강화
- ② 청소년활동 공간의 재구조화 및 혁신
- ③ 청소년활동 안전관리 강화

1-3. 청소년활동의 재구조화

- ① 청소년활동의 디지털 활용 지원
- ② 성과중심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1-1. 분야별 청소년 활동 다변화

1-1-1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활동 강화

□ ICT, 디지털 등 과학분야 역량강화 지원

- 청소년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중심으로 디지털 청소년활동 모형 개발 및 확산
- 청소년수련시설 교육프로그램 등 통해 ICT 및 디지털 관련 소양 교육 및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청소년 ICT 관련 경연대회 개최 및 활성화를 통해 ICT, 창의기술 분야 관련 청소년 참여 및 역량강화 기회 제공

□ 지속가능한 청소년활동 확대

-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 관련 교육 제공을 통해 인식을 확산하고 일상생활 속 실천활동 지원
- 청소년시설 등 활용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환경교육 확산
 - 청소년시설과 환경 관련기관 연계를 통해 환경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청소년 대상 환경 교육 추진
 - 청소년지도사의 환경 이해 및 프로그램 개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지원

□ 청소년 경제 관련 역량 제고 지원

-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대상 경제교육 지원
 - 학교 내 교육콘텐츠 등 활용하여 쉼터 청소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등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
-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사례중심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 청소년 전기(9~12세), 중기(13~18세), 후기(19~24세)의 연령대별 특성과,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 교사, 청소년 지도자 등 대상 경제교육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 청소년 경제교육을 위한 지도자 연수과정 개발 및 관련 인력풀 운영

□ 정책여건을 반영한 역량지표 및 제도 개선

- 사회 여건 변화, 교육과정 개정 등 반영하여 청소년활동 전반에 적용·활용되는 청소년활동 역량지표 개선(디지털분야 추가 등)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개발 6대 청소년활동 역량지표('18) : ①비판적 사고 ②의사소통 ③협업 ④창의력 ⑤사회정서 ⑥진로개발역량
 - ※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개편을 통해 실효성 제고
 -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자기도전포상제 활동영역 확대 및 청소년 시설 등과의 연계 활성화 방안 검토

1-1-2

청소년 수요 맞춤형 진로지원

□ 개별 맞춤형 진로지원 교육 제공

- 청소년 개인 적성·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상담 운영 및 진로 체험정보제공 시스템('꿈길')을 통해 진로체험 관련 정보 상시 제공
- 학교 내 진로관련 과목 등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계획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 협업 기반 진로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형태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학교 및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
- 지역별 특화 사업을 중심으로 경제단체, 기업 등과 협업하여 민·관 협력의 현장중심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추진
 - 청소년 수련시설 등 진로지원 기관과 지역사회 주요 산업 관련 기관·단체 간 협업을 통해 분야별 진로 정보 제공 및 활동 다변화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등 통해 청소년 진로체험 제공 기관 확대를 유도하고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 제공

□ 분야별·대상별 진로지원 프로그램 확대

-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를 통해 청소년의 과학기술분야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 직무 멘토링 등 다각적인 지원 제공
- 농촌지역 인재양성 및 청소년 진로지원 위한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1-1-3

테마별 자기주도형 청소년활동 활성화

□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기반 강화

-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 활용 등 통해 국제교류방식 다양화 추진
 - 대면 교류와 함께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참여의 장 운영 등 비대면-대면 융합형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를 통해 세계 청소년의 문화교류 및 세계시민으로서의 성장 기회 제공
-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청소년 주도의 국제 논의 및 활동 기회 제공
- 청소년 국제 교류 현황 정보를 청소년 시설 등에 제공 및 활용토록 지원하고, 국가간 교류 시 청소년시설 연계 추진

□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

- 문화예술 분야 관련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율동아리 활동 지원
- 학교 밖 청소년대상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확대
- 부처간 협업을 기반으로 1학생 1예술활동 등 학교 내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예술강사 활동 환경 개선 등 인프라 내실화
- 사각지대 없는 문화예술교육 확산 위해 문화소외지역 소규모 학교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운영
 - *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 청소년 스포츠 활동 및 체험기회 활성화

- 청소년 생활체육 보급을 위해 교내·외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확대, 학교-지정스포츠클럽 간 연계 강화
- 청소년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2024년 강원) 스포츠 분야 청소년 간 국제 교류 및 화합의 장 마련

□ 신기술산업 관련 청소년 활동 다변화

- 청소년의 과학 관심·흥미도 향상을 위해 관련 교류·소통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 활동을 촉진
 - * 예) 청소년 과학페어, 청소년과학대장정 등
- 청소년 북극연구체험단, ‘찾아가는 해양교육’ 등 통해 해양·극지 관련 청소년 교육·활동 확대

□ 청소년주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 청소년 자원봉사·사회기여 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지도사 역량 제고
 - 청소년지도사 간 네트워킹 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 등

1-1-4

청소년 자치 및 정책참여 활동 강화

□ 청소년 자치 참여활동 활성화

- 활동프로그램 등 개발 시 청소년 자치조직 제안 및 참여 보장
 - 프로그램·사업의 대상으로서의 청소년을 넘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설계단계부터 청소년 주도의 자치조직 중심 참여가 이뤄지도록 지원

- 청소년활동 시설 내 청소년자치조직 운영 확산
 - 청소년활동 시설 내 다양한 청소년자치조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
 - 청소년활동 시설 평가 기준에 청소년자치조직 운영에 대한 항목 추가 및 구체적 평가 기준 마련 검토

□ 청소년 정책참여 관련 활동 지원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의회* 운영 실태 파악 및 활성화 지원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지자체에서 청소년 의회 구성·운영 관련 조례 운영 중
- 청소년이 법제 관련 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운영
- 청소년참여예산제 정착 및 확산 위한 제도적 지원

□ 청소년참여기구 실효성 확보

-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역단위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 내 정책제안교육 등 참여 관련 교육운영 확대, 참여 지도인력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
- 청소년 참여기구 간 활동교류 및 연계체계 마련
 - 지역 내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체 구성, 정책제안 교차검토 등 참여기구 간 연합활동 기반 구축
 - 학교와 지역 내 청소년 참여 관련 활동정보 공유방안 마련
- 청소년 참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원
 - 참여기구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 및 선배위원 멘토링 등 교류 지원
- 지자체가 청소년특별회의 등 참여기구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및 모니터링 등 지원

1-2. 청소년활동 연계 강화 및 공간 혁신

1-2-1

학교-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청소년활동 강화

□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자유학기제 등 연계 강화

- 활동과 학교 간 연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청소년수련시설 등과 시·군·구-교육(지원)청 간 지역청소년 활동·교육 지원 협력체계 구축하고 지역청소년 위한 교육과정 기획·개발 등 추진
-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교과과정 연계 강화
 -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장비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특성화된 청소년활동 콘텐츠 중심 과정 개발
 - * 해양, 우주, 농생명 등 전문콘텐츠 교과과정 개발

□ 문제기반학습(Project Based Learning) 등 활용한 청소년 주도 활동 확대

- * Project Based Learning(PBL) : 제시된 문제를 학습자가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주도형 학습방식으로 문제해결능력, 공동체 협력, 의사소통 능력 등 향상
-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 상호 활용할 수 있는 PBL 기반 청소년 활동 개발·보급
- 지역사회 특성 및 여건과 연계하여 지역형 PBL 활동 모델 운영 추진(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개발한 KYWA형 PBL 운영 모형 활용 등)
- 우수 PBL 활동 사례 확산 및 홍보 등 통해 활성화 지원

□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강화

- 지역별 특성과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활동 중심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진로체험형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운영

- 초등 방과후 돌봄과 중등 방과후 돌봄이 연계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연계 협력
- 학교 내 공간을 활용하여 학교 안 돌봄·교육 복합형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추진
 - * 교육의 연장선에서 중학교 내 공간을 활용하여 복합형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전문적 돌봄 및 교육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활동 지원체계 마련

- 기초 지자체 단위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청소년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역할 강화
- ‘청소년활동 자원지도사’ 양성 및 지원체계 구축
 - 시·도 수준의 광역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활용하여 ‘청소년활동 자원지도사’ 양성과정 개발 및 교육 등 진행
- 청소년 활동의 탈시설화 등 지역사회·마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영역 확장
 - 지역·마을 내 소규모 활동 공간과 자발적 청소년 조직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민간조직과 연대 등 지원

1-2-2

청소년활동 공간의 재구조화 및 혁신

□ 청소년 활동공간의 확장

- 청소년시설 내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활동공간을 구축하여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활동시설 체계 확장
 - 디지털 활동공간을 활용하여 학교,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및 활동 서비스 제공

□ 소규모 청소년활동 공간 관리체계 마련

- 지역사회 중심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청소년 활동공간(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 검토
 - 청소년시설 설치기준 개선 등을 통하여 소규모 청소년활동 공간을 법적 관리 대상으로 편입 추진
- 지역별 특성에 맞춘 소규모 청소년활동 공간(시설) 설치·운영
 - 지역별 여건 및 청소년 수요를 고려하여 청소년이 쉽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친화형 공간 마련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 수원 자유공간 청개구리 연못(6개소), 군포 청소년 카페 teen터(4개소), 고양: 자유공간(3개소) 등

□ 학교 내 청소년활동 공간 조성 활성화

- 학교 내 유휴 교실을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구성 추진
- 학교 내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위기청소년 지원까지 연계할 수 있는 확장 모델 검토

1-2-3

청소년활동 안전관리 강화

□ 청소년 시설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 수련시설 안전관리종합시스템(YSMS)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청소년 활동 시설의 안전이력 관리 등 관리체계 마련
 - 전국 수련시설 안전정보 및 시설정보 통합관리로 청소년 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 확보
-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위해 안전 관련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운영, 청소년 안전문화 캠페인 운영

- 청소년 안전의식 수준·현황 파악을 위한 ‘청소년 안전인식 조사’ 방안 마련 및 조사 실시(청소년 시설 이용자, 학생 등)

□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내실화 추진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 지속 실시
- 시설 종합평가체계 내실화를 위해 종합평가 항목별 세부 검토를 진행하고, 실효성·시의성 있는 평가항목으로 개선방안 도출
-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현장 전문가 중심 컨설팅 지원 등 통해 자율적 개선 지원

*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평가제 운영 중

□ 청소년수련시설 정보 관련 관리 및 공개체계 마련

-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종합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
 - 축적된 데이터의 분석 결과, 시설 이력 사항 등을 안전관리, 시설 이용, 학술 및 정책연구를 위한 자료 제공 등으로 활용

- 청소년수련시설 정보공시제 운영

* YSMS에 집적된 수련시설 종합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 검토

□ 청소년 활동 관련 안전교육 강화

- 안전한 청소년 활동과 안전인식 제고를 위해 안전체험교실 및 안전체험관 지속 확충
- 해양교육원 등 활용하여, 생존수영 등 해양활동 관련 안전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수련시설에 심폐소생술 등 포함 응급처치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시설 이용 청소년 및 종사자 등 대상으로 응급처치 안전교육 실시

1-3. 청소년 활동의 재구조화

1-3-1

청소년활동의 디지털 활용 지원

□ 청소년활동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개편 및 기능 보완
 - 수요자 관점을 반영하여 편의기능 등 재구조화하고, 학교 제출서류 제공 기능 등 부가기능 강화
- 청소년활동 관련 빅데이터 생산 및 관리, 청소년 시설·단체 등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컨설팅 제공 위한 플랫폼 구축
- 청소년 디지털 활동 기반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내 수요 등 반영하여 ‘온라인 청소년 활동 콘텐츠’ 개발·제공
- 청소년이 디지털 공간에서 청소년 활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관련 온라인 청소년활동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활동공간 마련

□ 청소년활동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지원

- 청소년 활동 관련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집적·분석·활용을 위해 청소년활동 데이터 표준화 추진
- 청소년 시설, 단체, 기관 및 지자체 등이 보유한 관련 청소년 활동 정보 집적·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1-3-2

성과중심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특성 맞춤형 청소년 활동 모델 개발

- 생애주기 및 특성에 맞춘 표준 청소년활동 가이드라인 개발 검토
 - 성장단계별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주제 설정 등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 * 9~12세(초기 청소년, 초등학생), 13~15세(중초기 청소년, 중학생), 16~18세(중후기 청소년, 고등학생), 19세 이후(후기 청소년)

□ 성장단계별 활동 관리 위한 청소년활동 이력제 도입 검토

-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활동 계획과 내역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활동이력관리체계(청소년활동 이력제) 구축 추진*
- * 기 구축 플랫폼 활용 가능여부 등 우선 검토
- 청소년활동 이력제를 통해 축적된 정형, 비정형 데이터는 개인 맞춤형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

□ 청소년활동 성과관리 체계 구축

- 표준화된 청소년활동 역량 지표를 개발하고 청소년 시설 등에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청소년활동 정책의 기존 정량평가 중심 성과관리를 질적 평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안 검토
- * (예시) 정책목적→기능과 사업→사업수행→수행 전후 영향도→차이분석 →환류

2 촘촘한 청소년 지원망 강화

2-1. 차별과 배제 없는 청소년 지원

- ① 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보호지원
-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
- ③ 신 소외 청소년 지원체계 마련
- ④ 다문화 및 장애청소년 지원 강화

2-2. 청소년 특성별 자립 지원

- ①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기반 강화
- ② 후기 청소년의 안정적 삶 지원
- ③ 청소년(한)부모 맞춤형 지원 제공

2-3. 청소년 복지 지원 인프라 개편

- ① 지역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대
- ② 위기 수준별 지원체계 강화
- ③ 데이터 기반 청소년지원체계 구축

2-1. 차별과 배제 없는 청소년 지원

2-1-1

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보호 지원

□ 가정 밖 청소년 조기발굴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청소년상담1388, 찾아가는 아웃리치,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지자체 및 관계기관 연계 등 통해 가정 밖 청소년 발굴 강화
- 자립지원 앱('자립해냄') 기능개선 및 서비스 다양화 등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정책적 서비스 제공 관련 정보제공 내실화

□ 청소년 쉼터 이용 지원 강화

- 쉼터 내 청소년 맞춤형 생활지원, 상담, 교육, 문화활동 등 통해 건강한 쉼터 생활 제공
- 어린 시기 가출 등으로 인한 대인관계 어려움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상담 지원, 사회성 훈련 제공 등 지원 강화

□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인프라 강화

- 쉼터 종사자 역량 제고를 통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준비 지원 내실화
 - * 관련 교육 제공 등
- 가정 밖 청소년 유형을 고려한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확대
 - 초기 가출 및 재가출, 자립 준비 수준 등 입소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성화된 쉼터·자립지원관 시설 확충 추진
 - 쉼터 퇴소 후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이 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관을 전국 시·도로 확대 추진

2-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

□ 학교 밖 청소년 공정 지원 체계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동등한 권리 보장 강화 및 협력
 - 공공부문 각종 공모전, 프로그램 등 참가 자격을 '학생 및 동일 연령 청소년'으로 개선하고 민간 포함 사회 전반으로 확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프라 고도화

-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 역량강화, 진로체험 등 다양한 활동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 확충
 - *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부족으로 학습지원 직업역량지원 교육지원 등 지원 강화에 제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미설치 지역 중심 신규 꿈드림 센터 설치, 종사자 단계적 인력확충 통해 전문적 지원 내실화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 강화

-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의 공적 지원체계로의 정보 연계 강화
 - 사전 정보제공 동의 없이 정보 연계가 가능한 대상을 초·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
 - *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마련('22.12) → 개정 추진('23~)
 - 학교를 그만 둔 학생 정보가 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즉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원연수 활성화 및 정보연계 모니터링 강화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시 참여학생 대상 꿈드림센터 홍보 활성화
 - * 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게 숙려기간(1~7주)을 제공하여 충동적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공백 해소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 복지시설 간 정보 연계 강화

2-1-3

신 소외 청소년 지원체계 마련

□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기반 구축

-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등 통해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
 - * 설문조사, 심층조사 및 데이터 행정조사 등
- 실태파악 위해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 연계 조사·분석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교육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통해 설문 참여 안내·홍보
- 실태조사 결과 등 토대로 가족돌봄청(소)년 발굴·지원체계 마련

□ 은둔형 청소년 맞춤 지원 기반 구축

- * (은둔형 청소년)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또는 일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학교 및 청소년지원기관 등 통해 은둔 청소년과 가족을 지원하는 원스톱지원 전담팀 구성 및 장기적인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가족 내 위기로 인한 위기 청소년 지원기반 마련

- 수용자 자녀 위기 발굴 실태 파악 및 지원 강화
 - 수용자 자녀 현황조사 정례화(매년)하고, 수용자 자녀 지원 모니터링
- 자살사고사 유가족 청소년 사례 관리 등 위해 정보연계, 심리안정 위한 상담, 사례관리 등 지원
- 부채상속위기에 놓인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법률지원 체계 구축·운영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관련 민법 개정(제1019조)*과 연계하여 위기청소년 법률지원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지자체 지원 조례 적용 연령범위 개선(만 19세 이하 → 만 24세 이하) 등 검토
- * [민법 제1019조 개정, '22.11.24]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간 한정승인(상속 취득 재산 한도 내 채무 변제 조건) 기회 부여

2-1-4

다문화 및 장애청소년 지원 강화

□ 다문화가정 청소년 사회적응 등 지원 확대

-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제고 위해 대상 특성별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교육 실시 및 원격학습 콘텐츠·자료 제작, 배포
 - * 전국 가족센터 등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 실시 등
-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조기 적응을 위해 '징검다리과정' 운영 내실화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 확대
- 학습지원 도구·수단 다양화, 상담 등 맞춤형 지원 활성화
 -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심리상담 및 진로지도 확대 등

□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기반 내실화

- 레인보우스쿨로 연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 발굴 및 지원 강화
 - 레인보우스쿨을 통해 한국어 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상담, 한국어 교육, 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진로교육 등 지원
-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 추진 관련 기반으로서 이주배경 청소년 종합 통계 구축 및 제도개선 추진
 - * 통계청(이주배경 청소년 통계 DB), 교육부(이주배경 청소년 학업중단율) 등 행정 데이터 연계하여 유형별·연령별·지역별 현황 등 분석
 - 통계분석 기반으로 지원 강화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

□ 장애 및 경계선지능 청소년 대상 지원 체계 구축

- 장애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심리상담 등 가족지원 확대
 - 발달장애 청소년 가정 부모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해 양육 피로도 해소

○ 경계선지능* 청소년 조기선별 및 관련 지원방안 마련

* 일반적으로 지능지수 70~85 사이에 속하여 지적장애의 연속 상에 있으나, 지적장애로 미분류(장애인구의 약 2.7배), 주의 집중이 어렵고 의사소통 등에 서툴러 학습부진 등 발생

- 경계선지능 청소년 조기 선별을 위한 선별검사를 신규로 개발·보급하고,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추진

○ 컴퓨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조기선별 위한 진단 및 사례관리 등 지원

2-2. 청소년 특성별 자립 지원

2-2-1

쉼터 입·퇴소 청소년 자립기반 강화

□ 쉼터 퇴소 청소년 지원 형평성 제고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이 유사 정책대상(자립준비청년 등)에 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추진
-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 내용 구체화 검토
 - *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취업·경제적 지원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자립 정착금 지급,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된 반면에 쉼터 퇴소 청소년 지원 규정은 포괄적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의 실질적 자립 기반 제공

- 쉼터 퇴소 후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 마련이 가능토록 지원 확대
 - * 자립지원수당('21년 신설) : 1인당 월 30만원, 3년 간 지급
자립정착금 : 일부 시도에서만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
- 쉼터 퇴소 청소년 공공 임대주택 지원
- 쉼터 입·퇴소 청소년 대상 주거, 소득·생계·금융, 진학, 취업교육·훈련 등 지원제도* 안내서 제작·배포
 - * 지원제도 예시 : (주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쉼터 퇴소청소년 공공 임대주택 지원 (소득생계금융) 청년희망키움통장,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진학)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취업교육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 학업 및 취업 등 진로지원 강화

- 학업 지원 위해 대학 장학금 및 행복기숙사 우선 지원 강화*
 - * 근로장학금('21.8월~), 국가장학금Ⅱ유형('22.3월~) / 행복기숙사('22.2월~)

- 쉼터 퇴소 청소년 대상 진로 및 취업지원 등 상담 강화
- 쉼터 퇴소 청소년 등 대상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 '도전+프로그램' 및 '청년도전준비금' 등 지원

2-2-2

후기청소년의 안정적 삶 지원

□ 후기청소년 대상 심리·정서 안정 지원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통해 후기청소년 맞춤형 심리·상담서비스 및 관련 취업·주거지원 등 정부지원정책 정보 통합 제공
- 군상담관 제도 등 활용하여 군 복무 후기청소년의 정서·심리적 상담 및 적응 지원 등 추진

□ 진로 지원 및 창업 기회 제공 확대

- 비진학·미취업 후기청소년(NEET족) 대상 진로의식 고취, 진로설계 코칭 및 관련 직업교육 연계 지원
- 청소년문화의집 등 소규모 공간을 활용하여 후기청소년 진로준비 모임 등 위한 공간 이용 지원
- 청소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기업가 정신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비즈쿨 페스티벌 등) 지속 운영
-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통해 후기 청소년(청년) 대상 창업지원 적극 추진
- 창업 관련 청소년 동아리 활동, 자유학기제 등 연계한 창업 활동 등 청소년 주도 활동 지원
- 청소년의 사회적 경제 관련 활동으로 청소년 시설 내 청소년협동조합 운영 지원 등 추진

□ 후기청소년 취업 지원 및 경제적 기반 강화

- 청년워크넷 등 통해 일자리, 직업진로, 고용정책 등 정보제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기청소년(청년)**의 취업 촉진,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취업을 통한 경제적 지원 확대
 - *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2년 간 최대 1,20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
 - ** 6개월이상 실업, 고졸이하 학력,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등
-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사업 등 통해 주거지원 강화

2-2-3

청소년(한)부모 맞춤형 지원 제공

□ 청소년(한)부모 사례관리 등 맞춤 지원

-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지원 강화 위해 ‘자립지원 패키지’ 사업 지속 추진
 - * (자립지원패키지)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 안내, 정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 사업('22.7월부터 시범실시)
- 청소년부모 등 취약가족 통합사례관리(학습·정서, 생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를 지원하는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 수행 가족센터 전국으로 확대
 - * 사업수행기관(가족센터) : ('21년) 88개소 → ('22년) 93개소
- 출산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학업서비스(검정고시 지원 등)을 원하는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하여 학업 지원

□ 청소년(한)부모 경제적 지원 강화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22.7~12 시행) 결과 및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본사업화 검토
 -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대상으로 자녀 1명당 20만원씩 6개월 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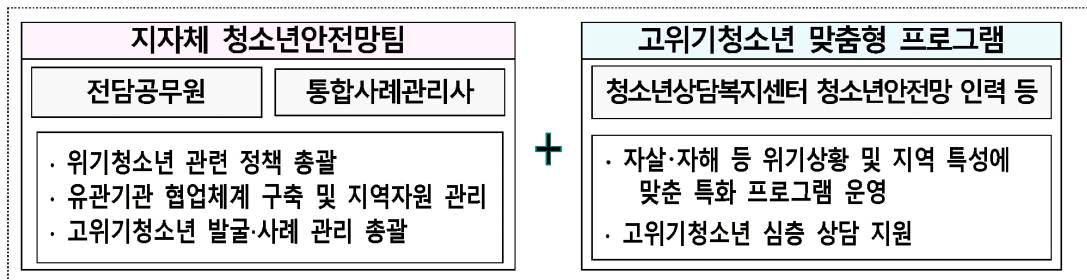
2-3. 청소년 복지 지원 인프라 개편

2-3-1

지역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인프라 확대

□ 청소년안전망 기능 및 인프라 내실화

-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단계적으로 확대, 전담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강화



- 위기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고용 안정화·처우 개선 추진

□ 지역사회 내 위기 청소년 대응체계 확립

- 청소년 위기상황 발생 시 학교-청소년 시설 간 연계·지원 강화
 - 학교-교육청-지역 내 청소년센터(상담복지센터 등)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청소년 위기상황 시 신속 공동대응
 -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운영 및 청소년 대응 협의체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등에 교육청 적극 참여 및 학교 안 위기청소년 발굴·연계 강화
- 기초자치단체 내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총괄 관리 체계 구축
 - 위기청소년 복합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 간 연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지역 내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추진
- 지역 내 청소년 위기 지원 기관 및 시스템 연계 협력 강화

2-3-2

위기 수준별 지원체계 강화

□ 위기청소년 조기발굴 및 지원 강화

-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서비스(사이버아웃리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활용으로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친 위기청소년 발굴 강화
 - * 인터넷 카페, SNS 등의 온라인 매체로 상담자가 직접 찾아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상담 활동
-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및 위기수준별 상담서비스 제공 위한 청소년 동반자 확대 및 처우개선
- 상담복지센터 내 1388청소년지원단*의 위기청소년 지원 역량강화를 위해 청소년상담 관련 교육 제공
 - * 지역 내 위기청소년 지원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학, 법률 등) 등으로 구성
-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의 효율적 운영으로 학교부적응, 학업중단위기,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강화

□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조기발굴 및 지원 강화

- 고위기 청소년 발굴을 위한 학교 내 및 시설 이용 청소년 등 대상 위기 진단과 연계 지원체계 강화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고위기 특화 전문 지원을 위한 인프라 운영, 인력 배치 등 확대
 - * '19년 운영모형 개발 후 '21~'22년 시범운영 중이며 집중 사례관리 및 효과성 측정 등 포함

□ 위기청소년 심리외상지원 체계 마련

- 청소년 심리외상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검토
 - *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유관 법령에 심리외상 지원 등 관련 규정 검토 및 개선·신설 추진

- 상담복지센터 내 집중심리클리닉을 심리외상지원체계로 확대 개편 검토
- 숙박형 심리외상지원을 위하여 시·도에 설치한 일시보호소, 청소년 위스쿨 등과 프로그램 연계 검토

□ 정서행동문제 치유인프라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기숙형 치유시설 거점별 확충 확대
 -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2012) - 경상권 지역청소년치료재활센터(대구 달성군) 건립(2021)
- 치료재활센터와 학교·교육청 간 협업을 통해 청소년재활치료센터 이용 후 학교 복귀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 학교에 복귀한 학생이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후속 프로그램에 적극적 참여 기회 부여 등 학교 차원의 사후관리 협업

2-3-3

데이터기반 청소년지원체계 구축

□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지원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학교·경찰·시설 등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위기청소년 조기발굴 유도
 - 위기유형 및 위기도에 따라 유관기관의 맞춤형 서비스 통합 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 위기수준 진단 후 통합서비스 계획수립 →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 사후관리
- 시스템 내 위기청소년 관련 서비스·정보 안내, 유관 서비스 신청 및 예약 기능 등 편의기능을 탑재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청소년상담 1388 기능강화로 접근성 제고

- 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및 상담 접근성 제고 등 위해 청소년상담 1388 기능 강화 추진
 - 도서산간 지역 거주 청소년 대상 서비스 지원을 위한 화상상담 시스템 구축 등
- 인력 확충 등 통해 상담 대기시간 단축 등 편의성을 제고하고, 빅데이터 기반 상담 제공으로 전문성 강화

3 [보호] 청소년 보호체계 대응력 제고

3-1. 新 유해환경 내 청소년 보호망 강화

- ①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체계 구축
- ② 온·오프라인 통합 유해환경 단속 및 개선지원
- ③ 사이버 폭력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내실화

3-2. 유해행위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 ① 청소년대상 유해행위 대응조치 내실화
- ② 범죄 등 유해행위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3-3. 청소년의 근로 보호 강화

- ① 사각지대 없는 근로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 ② 근로 청소년 부당대우 구제 및 지원강화
- ③ 청소년 및 사용자 근로보호 인식 개선

3-4. 청소년 보호망 강화를 위한 환경 개선

- ① 청소년 회복지원 제도 및 인프라 개선
- ② 청소년이 안전한 친화적 환경 조성
- ③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예방 강화

3-1. 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3-1-1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 디지털매체 환경 확산 관련 청소년 보호 기능 강화

- 디지털매체 환경 내 청소년이 직면하는 유해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마련
 - 디지털매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상황 대응 및 선제적 보호조치 관련 각 이용대상별* 가이드라인 마련
 - * 디지털미디어 기업, 디지털미디어 이용자, 청소년 및 보호자 등
- 디지털매체 유해 상황 신속차단 및 구제 추진
 - 디지털 매체로 전달, 확산되는 유해 정보 및 콘텐츠 차단 위한 제도 정비 추진, 디지털 매개 유해행위 등 발생 시 신속 지원체계 구축
- 청소년 보호 관련 플랫폼(인터넷개인방송, SNS, 커뮤니티, 검색포털 등)의 청소년보호조치 이행점검 및 청소년 보호협력 강화, 자율캠페인 전개
 - *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지침 준수(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제작 금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심야(22~6시) 및 장시간 출연금지 등) 및 크리에이터 청소년 보호 교육지원 등

□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지원 강화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조기발굴 등 예방 강화
 - 디지털매체 과의존 방지 및 위기 조기발굴 위해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개선 등 내실화
- 발굴된 위험군 청소년 등 대상 드림마을 및 디딤센터 연계, 치유프로그램 제공 통한 치유지원 확대

- 진단·발굴-치유지원-사후관리로 이어지는 통합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 치유기관 간 협력 강화
- 청소년 및 부모 등 대상 디지털·미디어 교육 제도 기반 확충
 - 학교, 가정, 지역 연계를 통해 청소년, 보호자·교육자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소통·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교과, 동아리(초·중·고), 자유학기제(중학교), 고교학점제(고등학교) 등 교육과정 및 진로탐색 과정에 연계된 청소년 미디어 교육 실시

□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실태 파악 및 지원

- 개인정보 관련 청소년 권리 교육 강화
 -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활용,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관련 인식 제고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내 아동·청소년용 신고페이지 추가 등 통한 청소년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 지원
- 부모·양육자 대상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매개 환경 및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3-1-2

온·오프라인 유해환경 단속 강화 및 개선 지원

□ 도박 예방 및 유해성 관리

-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체계적 예방교육 추진 위한 방안 마련
- 도박문제 예방교육 확대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운영 강화 및 관계부처 청소년 기관과의 연계 확대

□ 청소년 유해업소유해 광고물 관리 및 단속 강화

- 온라인 상 유해광고물 심의 및 신속한 삭제 조치 강화
 - 온라인 상 청소년 유해약물·유해업소 관련 콘텐츠 등 신고 접수 시 심의·조치 등 신속 대응 추진
 - 불법 도박 사이트, 도박 홍보 콘텐츠, 성인 광고·음란물 등 유해 매체·사이트 단속 및 삭제, 차단 등 조치 강화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활용하여 청소년이 자주 출입·이용하는 사업장 대상 점검 확대 추진
- 신·변종 유해업소 출현과 업소형태의 지능화를 통한 단속 회피 등 대응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 * 유해정도에 따른 신속 조치 등 대응

□ 청소년 대상 온·오프라인을 통한 유해약물 등 노출 차단

- 온·오프라인 청소년 대상 약물·담배·주류 등 불법 판매 근절 위한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
 - *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상 판매·유통 모니터링 확대

- 음주·흡연·마약 이용을 조장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콘텐츠 모니터링 및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실시
- 청소년 대상 음주·흡연·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및 지도자 역량 강화 지원
 -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지속 강화하고, 교사 등 지도자 대상 온·오프라인 청소년 유해요소 접근실태 등 정보 제공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교육·홍보자료 개발·보급 및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 프로그램 공모전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확산

3-1-3**사이버 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내실화****□ 사이버 폭력 유형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지도자 교육 역량 강화**

- 다양해진 디지털매개 폭력의 유형 실태 파악 및 청소년 대상 교육 지원
- 디지털매개 폭력 대응 교육 실시하기 위한 교육자 역량 제고
- 가정·학교·사회 등이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이버 폭력 실태·대응방안 등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제공
- 디지털 매개 폭력 예방 관련 인식 확산 및 이해도 제고 위한 캠페인 추진

□ 사이버 폭력 피해자에 대한 연계 지원체계 구축

- 디지털매개 학교 폭력 상황 모니터링 실시
-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위기 발생 시 상담·대응 인력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이해도·전문성 제고 위한 교육 실시
- 사이버 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 연계 지원 및 협력
 - 부처협업을 통해 청소년이 사이버 폭력 경험 시 관련 지원 제공 등 정보연계 및 피해자 지원 연계 등

3-2. 유해행위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3-2-1

청소년 대상 유해행위 대응조치 내실화

□ 범죄·유해 행위 관련 유인행위 처벌 등 조치 강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목적의 그루밍 방지 위한 제도개선 등 검토

□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 내실화

-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 확대 및 심의 독립성 확보
 - * (주요기능) ①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 등, ②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③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기능 강화,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플랫폼·콘텐츠 모니터링 등
- 보호위원회 관할 범위 확대 및 집행력 강화
- 청소년 보호 관련 타 위원회와의 연계 등 강화하여 내실있는 보호 조치 가능토록 체계 구축

□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및 사후조치 관련 기업의 책무 강화

- 인터넷 플랫폼*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모니터링과 이행점점 강화, 기업별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관련 투명성보고서 작성·공개
 - * 인터넷개인방송, SNS, 커뮤니티, 검색포털 등
- 디지털성범죄물 재유통 방지를 위한 DNA DB 구축 및 필터링 기술 제공 등 지원
-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시도 정황에 대한 기업 모니터링 등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3-2-2

범죄 등 유해행위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 아동·청소년 성범죄 행위자 관련 검거 강화체계 마련

- 정부-산업-NPOs 등 다주체 협업방식의 국제공조 신고시스템 구축
 - 인터폴 회원국 경찰을 활용하여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ISCE DB(인터폴 국제아동 성착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피해아동 식별과 수사현황 공유

□ 성범죄 피해 청소년에 대한 통합 지원시스템 정비

- 성매매 사이버 포대상담 등 통해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등 신고 및 상담 지원
 - * 청소년 성매매 의심정보 신고, 피해자 발굴 및 상담 등 지원
-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 내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역량 강화
- 청소년상담1388, 쉼터, Wee센터 등 청소년지원기관·시설과 여성 긴급전화1366 등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3-3. 청소년 근로보호 강화

3-3-1

사각지대 없는 근로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 新 근로유형 확산에 따른 근로청소년 보호방안 마련

- 플랫폼 기반 근로청소년에 대한 근로보호 강화
 -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 기존 청소년근로 보호체계에서 취약한 근로 형태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 추진
 - * 각 워커(Gig worker) 등 新 근로형태에 종사하는 청소년 대상 근로보호 방안 검토
- 취직인허증 금지 직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플랫폼 노동, 각 워커 등 新 근로형태 확산에 따라, 新 근로형태 중심 산업 중 청소년 유해 가능성 등 고려하여 검토
 - 현행 취직인허증 금지직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권리 보호 강화

- 현장실습 참여기업 자격 기준 강화 및 관리 지원
 - 현장실습 기업 중 노동법 준수 취약기업 등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 및 노무관리 컨설팅 등 지원
- 현장실습생 권리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
 - 현장실습 LMS 기능개선 및 상담 챗봇 등 통해 활용도 제고
 -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홍보 강화
- 현장실습산업체 대상 모니터링·점검 내실화
 - 현장실습 참여 업체 대상 수시 모니터링 실시

□ 근로보호 사각지대로서 예체능 분야 청소년 보호 강화

-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등 보장 위한 지도·점검 실시
- 청소년 연예인(연습생 포함)을 위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
- 청소년 운동선수 관련 감독, 코치 등 관계자 교육 실시를 통해 학생 선수 보호 기반 구축

3-3-2

근로 청소년 부당처우 구제 및 지원강화

□ 청소년 근로보호 관련 지원체계 내실화

- 청소년 근로보호 사업 간 연계 강화 및 확대
 - 청소년 근로보호 내실화 위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여가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고용부) 등 유관 기관 사업 간 연계·협력 강화
- 근로청소년 부당처우 관련 상담부터 구제까지 지원 연계 강화
 -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신고 활성화를 위한 상담 연계 강화
- 청소년 근로현장 중심 지원 확대
 - 청소년근로현장도우미 확대 운영을 통해 부당처우 현장 방문, 사업주와 분쟁 중재 및 신고 지원 강화
 - 근로감독관·공인노무사 등을 통한 근로권익 침해 구제 지원 및 부당해고 구제 지원

□ 사업장 대상 청소년 근로환경 모니터링 강화

- 주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 정기 점검 및 제도 활동 내실화
 - 청소년고용금지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감독하고, 불시점검 등 통해 사업장의 법령 준수 지속 모니터링
 - *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
- 취약계층 다수 고용 및 상습 법위반 등 법 준수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 상습 위반 사업장 및 사업주에 대한 감독 강화
 -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 등의 배달종사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 점검

3-3-3

청소년 및 사용자 근로보호 인식 개선

□ 청소년의 자율적 보호를 위한 근로보호 관련 교육 내실화

- 학생 스스로 근로보호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확대
 - 직업계고학생 등 대상 근로 권리·산업안전보건 등 관련 교육 제공
 - 근로보호센터 및 근로권익센터 통한 청소년 대상 근로보호 교육 강화
- 학교 밖, 쉽터 이용 등 근로보호 관련 교육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 대상 근로보호 교육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근로권익 상담,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사업주 면담 현장 지원 등 근로권익 보호 및 지원 강화
 -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연계 교육 및 진로캠프 등
- 청소년의 직업윤리 의식 제고 교육 추진
 - 청소년의 눈높이 및 학교급을 고려한 직업윤리 교육 실시

□ 사용자 대상 근로보호 관련 교육 실시 및 인식 제고

- 청소년 고용사업자 대상 근로권익 보호 안내 및 교육 강화
 - 사업주 등 대상 청소년 근로보호 사항* 안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활용), 중소기업장 노무관리 지도 등 실시
 - *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및 직장괴롭힘 예방 등
 -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를 통한 청소년 고용사업장 모니터링 및 근로권익 보호 사항 안내 등 실시
 - 특수고용형태 직종(배달 등) 고용업주, 배달업체 등 대상 안전교육 추진
- 법규 위반 사업주 대상 근로 관련 법령 교육 실시

3-4. 청소년 보호망 강화를 위한 환경 개선

3-4-1

청소년 회복지원 제도 및 인프라 개선

□ 청소년회복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강화

- 재비행 예방을 위한 인프라로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확충 검토
 -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년법 1호 처분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담·학업·자립 등 치료회복서비스 지원
-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상담복지센터 연계 등 통한 상담 지원,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위한 멘토링 지원 등 추진

3-4-2

청소년이 안전한 친화적 환경 조성

□ 청소년 등하교 및 밀집지역 대상 범죄예방 환경설계 체계 구축

- 지역 내 청소년 대상 범죄 및 안전사고 급증 지역 대상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CPTED) 설계 적용 검토

* 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폐가 및 재개발 지역 내 위험건물 진입차단시설 설치 및 개보수 추진

□ 지역 내 청소년 친화 디자인 조성

- 청소년 친화형 도시계획 및 공공디자인 조성 추진
 -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청소년 친화 디자인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추진

- 지역 내 청소년 친화 거리 조성 검토
- 지자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내 청소년 전문가 참여 확대

□ 청소년 안전 보행권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청소년 등하교 거리 및 학교 주변 보도 불법 주정차 연중 수시 집중 단속 실시
- 청소년 야간 안전을 위한 골목길 보안등 설치 및 조도 개선 사업 실시
 - 골목길 및 우범 지역 내 보안등 설치를 통해 보행자 야간 보행의 안전성 확보, 야간 조도 조사 및 문제점 개선
- 청소년 눈높이를 고려한 통행 관련 안내판 개선 및 야간 시인성 제고

3-4-3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예방 강화

□ 부모·양육자교육 및 상담 활성화

- 전국 244개소 가족센터를 통해 생애주기별, 가족유형별* 특성에 맞는 부모 역할, 아동 양육방법 등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 * 핵가족,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족 등
 - ** 예비부모교육,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부모 대상 상담 등 확대
 - 부모-자녀 갈등 등 가족문제 예방·해소를 위한 가족상담* 및 가족캠프** 운영
 - * 일반상담, 정보제공 상담, 집단상담 등 지원
 - ** 가족 공동 청소년활동을 바탕으로 의사소통과 가족애를 강화할 수 있는 주제중심 체험형 가족캠프 운영(국립청소년수련시설 활용)

□ 청소년 폭력 예방 교육 체계화

- 또래상담 지도교사 교육 내실화 및 맞춤형 코칭단 확대 등 통해 또래상담 활성화
-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어울림 프로그램 내실화 및 운영학교 지원 확대
- 찾아가는 교육, 디지털·메타버스 활용한 체험형 폭력예방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 관련 교육 프로그램 다양성 제고
-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홍보 강화 등 통해 인식 지속 확산

4 [추진기반] 정책 추진기반 재구조화

4-1.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 체계화

- ① 청소년정책 제도 및 자원기반 내실화
- ② 청소년지도자 지원 및 전문성 제고
- ③ 청소년시설·기관 운영 개선 및 기능 강화

4-2. 지역 중심의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강화

- ① 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 ②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정책사업 활성화
- ③ 지역 단위 청소년정책 연계·협력 강화

4-3. 청소년 권리강화 기반 구축

- 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②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권리인식 제고
- ③ 청소년 기본권 및 정책체계 내 대표성 강화

4-1.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 체계화

4-1-1

청소년 정책 제도 및 재원기반 내실화

□ 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청소년 관련 법제도 개편

- 주체로서의 청소년 지위 확립과 통합적 정책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청소년기본법」 개정
 - 활동, 복지, 보호 등의 ‘청소년 육성’ 범위를 넘어서 청소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청소년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개정 방향 검토
 - *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 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 상 기본계획의 범위가 청소년 정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기본계획 명칭 변경 개정
 - * (현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 청소년 정책 재정기반 효율화 도모

- 청소년 정책분야 재원확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 현 청소년 정책 관련 재원(일반회계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영 관련 현황 파악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재원확충 및 운용방안 검토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와 지역 내 청소년사업 간 연계·지원방안 마련
- 청소년육성기금 재원 수입구조 다변화 및 전입 가능한 신규 재원 발굴
 - 현재 복권기금전입금 중심의 수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방안 검토

□ 청소년 정책 대국민 홍보 및 인지도 제고

- 청소년 정책 관련 인식 확산 및 이해도 제고 위한 홍보 다변화
 - SNS, 인터넷 등 다매체를 통한 홍보 캠페인 강화
 -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모든 청소년 대상 ‘(가칭)청소년키트’ 제공
 - 청소년이 됨을 환영하며 청소년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발달·성장을 지원하는 ‘(가칭)청소년키트’* 제공
- * 청소년키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정책) 안내 자료, 진로.직업카드, 진로.직업체험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 참여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 및 지원 가능

【관련 사례】

- ① 세종시 꿈끼카드: 18세 관내 주민등록된 중학교 1학년 재학생(만13세 학교밖 청소년 포함)에게 연 10만원의 바우처 카드 지급
- ② 서울시교육청 모든 초등학생 대상 입학준비금 20만원 지급
- ③ 서울전입청년 웰컴박스: 타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청년 대상 웰컴박스(안내책자, 알쥐카드, 선택물품) 배송으로 서울시 청년정책 홍보 및 생활정보 제공

- 부처별 청소년 관련 정책 성과 및 통계보고서 매년 발간(정부합동)
 - 부처별 주요 청소년정책의 성과를 포괄할 수 있도록 현재 매년 발간되고 있는 청소년백서의 내용 범위를 확대 개편

4-1-2

청소년지도자 지원 및 전문성 제고

□ 청소년지도자지도사, 상담사 역량 강화 지원

- 청소년지도자 대상 디지털 전문교육을 위한 연수과정 운영 확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청소년지도자 관련 전문·직무연수과정에 디지털 관련 연수과정 확대
 - 양질의 디지털 교육운영을 위해 전문가 풀 운영 및 전문교육과정 콘텐츠 연구·개발 추진
- 현장중심 보수교육 과정 운영 확대 및 보수교육 체계화
 - 지역별·거점별 청소년지도사·상담사 보수교육을 확대하고, 사례 중심 워크숍 등 현장기반 보수교육 과정 확대
- 청소년 지도사 및 상담사 전문성 제고 위한 자격검정 개편 추진
 - 전문역량 확보 및 시의성 확보를 위해 현행 자격검정 시험내용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개편방안 마련 등
 - * 청소년지도자의 현장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 검토

□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 청소년지도사·상담사에 대한 정기적 보수체계 조사 실시
 - *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
 - 보수수준 등 실태 파악을 기초로 표준보수체계 마련 검토
- 청소년지도자 공제회 설립 검토 등 복지 체계 마련

□ 청소년지도자 배치기준 내실화

-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직무분석 실시 및 관련 데이터 관리

- 청소년 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상담사에 대한 정기적 직무 분석을 실시하고 배치기준 마련 등에 활용
 - 배치실태, 직무현황 등 관련 통계 작성 등 데이터 집적·관리
 -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배치기준 검토 및 개선 추진
 - 현행 청소년지도사·상담사 배치현황 및 직무분석 등을 기초로 배치기준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 위한 법령* 개정 등
-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5]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4-1-3

청소년시설·기관 운영개선 및 기능강화

□ 청소년 시설 종류 개편 추진

- 청소년시설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설종류 간소화 및 현대적인 용어로 변경
 -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센터
- 개별시설 명칭은 지역 환경·특성이나 해당 시설의 주요사업,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사용토록 검토
- * (예시) ○○청소년센터, ○○어울림센터, ○○진로센터, ○○센터 등

□ 국립-민간 청소년 시설 간 협력 강화

- 국립-민간청소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
 - 국립과 민간 청소년 활동시설 간 공동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도모

□ 청소년시설 맞춤형 운영 강화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별 특성·전문화 사업 추진
 - 청소년 시설의 지역별·유형별 특성에 기초한 맞춤형 사업개발

4-2. 지역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4-2-1

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 지역 기반 청소년정책 전담조직 등 확대

- 지자체(광역·기초) 청소년정책 전담조직 설치* 확대 및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운영 내실화

* 타 업무와 병행이 아닌 청소년업무 독립 전담조직

- 「청소년기본법」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개정을 통해 배치 의무화하고(현재 재량), 자격기준 설정 등 선발제도 마련 검토*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례 등 검토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허브로서 지역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 협업 강화

*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별 청소년 정책 추진 사례 공유의 장 마련(상담 완료 청소년의 사후관리를 위한 활동프로그램 연계 등 협업)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 재정비 및 운영 활성화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내실있는 운영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체계 마련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 지자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와(연 1회) 연계하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운영

* 우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선정·공표, 해당 지자체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 지자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체계 재정비

- 지자체 청소년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를 환류를 통한 개선 중심 성과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평가항목 개편 추진
- 지자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결과 대국민 공개 및 활용
 - 현재 포상·행사 중심의 결과 공개 외에 ‘청소년친화도시’ 신설 및 지정 검토 등 평가결과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지자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범위 확대
 -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예 : 상위 5%) 소속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대상 정부포상 실시

□ 지역의 청소년관련 사회공헌사업 연계 추진

- 지역 청소년 정책사업과 지역 내 기업체나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사업과의 연계 추진
 - 사회공헌사업과 연계가능한 청소년정책사업 발굴 및 연계협의 추진
- 민간기업(기업체)이나 공공기관 대상 청소년 관련 공익적 사업·활동 유도를 위한 청소년정책 및 사업 정보 제공 확대

4-2-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정책 사업 활성화

□ 청소년 주도형 지역 성장망 전국 확대

- 지역별 청소년성장망 지원 사업 확대
 -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청소년성장망으로 확대하여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축·운영
 - 청소년성장지원 정책모형 발굴·확산 및 사례 공유
- 청소년성장망 참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협의체 기구 운영
 - 사업 경험 공유를 위한 소통 플랫폼 운영
 - * 청소년성장망 사업의 개선·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대안 제시
- 지역 청소년성장망 전문 컨설팅 지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책평가분석센터 등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성장망 운영을 위한 전문 컨설팅 제공
 - * 청소년활동, 보호·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컨설팅 지원단 구성

□ 지역기반 마을형 청소년정책 체계 구축

- 마을단위 청소년전문가 발굴 및 활동 지원체제 구축
 - 청소년활동 및 보호·복지 분야의 청소년 관련 지역 전문가 발굴
- 청소년 주도의 마을 프로젝트 운영 활성화
 - 마을 내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청소년들이 주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참여활동 지원
- ‘마을형 청소년정책 커뮤니티’ 지역 지원센터 운영
 - 마을 내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청소년주도 마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마을형 청소년정책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 지원 기반 마련

-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기본법」 개정 추진
 -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를 개정하여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 등
 - *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개정 추진
 - * 경남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경남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 조례, 전북 완주군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조례 등 사례 참조

□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 정책적 지원 확대

-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 관련 특화 사업 등 개발·추진
 - 청소년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 운영
- 청소년의 지역생활권 내 이동권 보장 지원
 -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셔틀버스 지원, 읍면단위 공공셔틀버스 운영 등 청소년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 및 추진
- 지역 내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다양한 활동공간 구축·운영
 -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소규모 공간을 지정·운영하고, 지역 주민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4-2-3

지역 단위 청소년정책 연계·협력 강화

□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연계·협력 내실화

- 여성가족부-시·도 교육청 간 협력 체계 구축
 - 여성가족부-시·도 교육청과의 제도적 연구체계 구축을 위해 청소년 정책위원회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참여
 - 청소년정책-학교교육 간 연계·협력을 위한 교육청 조례 제정 추진
- 교육청·학교 및 청소년시설과의 효율적인 연계 시스템 도입 및 활성화
 - 지역 내 교육청·학교와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시설 등) 간의 연계를 위한 협의체 구성
 - 교육청·학교의 요구에 부합하는 청소년사업의 발굴 및 시행

□ 지역 다부처 정책협력 사업체계 지원

- 지자체 대상 공모 및 부처 연계·협력 등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다부처 정책협력 사업 확대
 - 지자체별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및 다부처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의 장' 정기적 운영
 - * 지역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참여기구 사업 연계
 - 정책 공모사업 추진시 다부처 협력사업 지원 공모제 부문 운영

4-3. 청소년 권리 강화 기반 구축

4-3-1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학교 안팎 청소년 건강 통합관리

- 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검진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홍보 강화

□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및 급식 사각지대 완화

- 청소년 식습관 개선 위해 교육자료 및 교육 가이드라인 등 개발·보급*
 - * 영양 식생활 교육자료, 신체활동 증진 등을 포함한 비만예방 교육자료 등
- 학교 외에 학교 밖 청소년, 쉼터 청소년 등에게도 관련 교육 등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 청소년 수련시설 급식시설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지도·점검 강화
- 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해 건강 생활습관 형성 교육 등 제공하는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지속
- 저소득층 등 취약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대상으로 기본적인 급식지원 강화 추진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대상 확대 및 서비스 제고

- 중위소득 등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신청률 제고 위한 홍보 강화
 - * 현재 9~24세 여성 청소년 중 청소년한부모,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지원 중

- 서비스 접근성·용이성 제고를 위해 전자바우처 이용 및 구매 가맹점 확대
 - 전자바우처('19년~) 사용 관련 불편·개선 사항 등 모니터링하여 개선하고, 온라인 구매 확대 등 사용처 확대 추진

□ 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 사각지대 해소

- 후기 청소년 대상 국가건강검진 홍보강화 및 사후관리 실시
 -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우울증검사의 검사주기 단축 및 성 건강 관련 항목 추가 등 후기 청소년 및 청년의 특성에 맞는 검진 실시
- 후기청소년·청년 대상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강화
 -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연계 강화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통한 마음건강 상담 지원 강화

4-3-2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권리 인식 제고

□ 청소년 대상 디지털 저작권 인식 교육 강화

- 초·중등생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통해 디지털 분야에서 제기되는 저작권 문제 관련 청소년 인식 제고 지원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내용에 청소년이 직면할 수 있는 저작권 사례 등 포함하여 교육 진행
- 학교 밖 청소년, 쉼터 청소년 등 대상 디지털 저작권 관련 교육 추진

□ 청소년 대상 디지털 환경 내 윤리원칙 내재화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메타버스 윤리원칙 홍보 강화 및 지속적인 보급·확산 추진(부처 협동)
 - * 메타버스 주 사용층인 아동·청소년용 홍보물 개발·확산 등

- 메타버스 개발자·운영자·이용(창작)자 등 영역별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 편리한 실천 윤리지침서 개발(부처 협동)
- 윤리원칙 교육 확대 위해 초·중등학교 찾아가는 실감교육 과정에 ‘메타버스 윤리원칙’ 강의 편성 및 보급·확산(부처 협동)

4-3-3

청소년 기본권 및 정책체계 내 대표성 강화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통한 권리 확산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이행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련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 *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도(‘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
(‘18) 11.8% → (‘19) 16.1% → (‘20) 21.2% (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청소년 관련 정책추진체계에 청소년 대표성 강화

- 청소년기관·시설 운영위원회에 청소년 참여 확대
 - 현재의 시설 내 운영위원회에의 청소년 대표 참여 및 확대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 등 추진
- 청소년 정책 관련 각종 위원회에 청소년(15세~24세) 위원 위촉 권고
- 국가 및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등 관련 추진체계에 청소년계 참여 보장 위한 법·제도 개선

패널토론 1

청소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 및 정책과제에 대한 제언

배 상 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패널토론 1

청소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 및 정책과제에 대한 제언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청소년의 삶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력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편재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시간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와 콘텐츠의 홍수 속에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현명한 미디어 프로슈머로서의 역량과 디지털 시민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미디어환경과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안]」에서는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제고, 정책추진과정에서의 디지털 활용과 더불어 관련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보호방안 강화 필요’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기성세대에게 ‘디지털’은 아날로그의 대척점으로 특정 기기나 플랫폼, 혹은 현실세계와 구분된 가상공간 정도로 체득되었다면, 청소년 세대에게 디지털은 이들의 일상적 삶의 터전 그 자체로 인식되어지며 이 같은 경향성은 앞으로 더욱 짙어질 것이다. 디지털원주민의 사고와 습성 등 특이성(singularity)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이 마련되어지길 기대하며,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정책연구를 업으로 삼는 자로서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과 정책과제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이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과 ‘디지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디어유해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디지털 시민성은 인지(미디어 리터러시), 행동(참여활동), 정의(윤리의식/규범)라는 세 가지 축이 연계되어 구현되는 산물이다. 즉, 디지털 사회에 적합한 행동(예: 디지털 사회 참여, 연계 통한 변혁적 행동)을 위해서는 이에 준하는 지식과 태도 및 성찰과 책임의식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ICT 및 디지털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 바람직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은 기술적 활용(technical skills)에 지나치게 주안점을 두기보다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균형 있는 교육과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업, 창의력이 포함된 6대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을 제시한 것이나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언어소양과 수리소양 이외에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활용하는 능력’인 디지털 소양을 3대 기초소양으로 포함시킨 것은 이 같은 관점에서 이루어진 조치이다.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해서는 ICT 하드웨어 보급 및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등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의 저연령화 현상과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시간 증가에 따른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토론자의 연구를 포함한 많은 조사결과들이 디지털 기기 및 미디어의 소비와 활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이와 관련한 파급효과가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폰의 사용, 게임이용, 유튜브 시청 등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어린나이부터 시작함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미디어 과의존 문제뿐만 아니라 유해콘텐츠의 소비는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미디어 이용의 저연령화 현상과 청소년 미디어 이용시간 증가 현상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관련부처 간 정책연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본 기본계획[안]에서도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미디어 교육제도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소통·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의 접근성과 효과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 정책 마련과 적극적인 사업의 시행이 기대된다. 특히,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행태와 가정환경 및 부모-자녀 관계성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자녀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모교육에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위기청소년과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미디어 이용 관련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안]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위기청소년 규모는 증가추세에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위기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에 비해 미디어 과이용/과의존 경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단순히 이용량의 문제를 넘어 이들이 부적절한 미디어콘텐츠의 소비와 이용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가정과 학교 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제공되고 이들이 디지털 시민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청소년일수록 디지털 격차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학교나 가정 밖의 청소년에게 미래사회의 필수역량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주체와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연계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UN아동권리위원회가 2021년 발표한 일반논평 제25호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4대 일반원칙 ① 비차별, ② 아동 최선의 이익, ③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④ 아동의 견해 존중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이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 당사국은 입법적·정책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 중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를 위해 당사국은 온라인상의 4C와 관련된 위험들을 식별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4C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이 겪는 공격적, 성적, 가치적 위험 요소들을 콘텐츠(contents), 접촉(contact), 행위(conduct), 계약(contract)이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기본계획[안]은 이 같은 청소년에 대한 권리침해 요소들에 대한 대응전략을 고루 담아내고자 고민과 노력한 결과물이라 판단된다. 다만,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현존하는 위험요소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위험요소 발생에 대한 주시와 발 빠른 대응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효과성 있는 정책과 부처 간 협업과 조율이 더해진다면 청소년의 온라인상 권리보호와 디지털시민성 함양이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패널토론 2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영역에 대한 토론

유 성 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패널토론 2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영역에 대한 토론

유성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에 제시된 “[추진기반] 정책 추진기반 재구조화” 영역의 주요내용은 3개의 중점과제(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 체계화, 지역 중심의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권리강화 기반 구축)와 각 중점과제별 3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기반 관련 과제와 더불어 청소년정책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는 지역 차원에서 주요 과제들을 포함함으로써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칭)청소년키트는 의미 있는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과 관련한 다양한 구성주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과 더불어 지역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의 인구감소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향후 5년간의 국가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추진기반] 영역의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하기를 바라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주요 계획을 표현함에 있어 “검토”라는 용어보다는 “수립 및 추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하여야 할 계획이라면 검토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보다 적절할 것임
-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제6차 기본계획에서도 언급되었는 바, 처우 개선 혹은 보장을 위한 법적근거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 청소년시설·기관 운영개선 및 기능강화와 관련하여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개발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개보수 혹은 기자재 확보 등을 지원하는 내용

도 함께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시설 종류 개편 추진과 관련한 내용은 주로 명칭변경 방안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바, 시설의 실질적인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강화와 관련하여 지역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 협업강화와 더불어 각 센터의 역할강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세부과제의 내용을 협업강화보다는 각 센터의 역할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친화도시, 청소년성장망, 청소년안전망 등 유사한 성격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어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인구감소 지역의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방안의 세부과제로 제시된 청소년의 지역생활권 내 이동권 보장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 내 청소년시설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정책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를 생산·수집·관리·분석하는 기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임. 특히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축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활동·보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각종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수집·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지자체 수준에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안)에서 아쉬운 것은 제6차 기본계획에서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던 청소년 권리·참여 관련 계획이 추진기반의 하위 영역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임

- 특히 청소년권리와 관련한 계획은 디지털 저작권 인식교육 강화, 디지털 환경 내 윤리원칙 내재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통한 권리 확산, 청소년 대표성 강화의 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바, 제6차 기본계획의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영역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EU는 물론 미국의 청소년정책의 주요 아젠다 가운데 하나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투표연령의 하향 조정 등 청소년의 정치·사회 영역에서의 참여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참여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추진기반] 영역과 관련한 제7차 기본계획(안)의 내용은 제6차 기본계획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제7차 기본계획(안)을 추진하는 향후 5년 동안에는 제6차 기본계획의 내용보다 더 심도 있게 해당 과제들을 접근추진함으로써 유사한 과제라 하더라도 차원을 달리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청사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패널토론 3

다양한 색깔을 가진 청소년의 목소리

윤 선 재

(청소년특별회의 의장)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패널토론 3

다양한 색깔을 가진 청소년의 목소리

윤선재 (청소년특별회의 의장)

청소년 활동 복지상담의 지역 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했다. 교육격차, 임금격차 등 여러 격차에 대한 지표가 공개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활동, 복지, 상담에 대한 지역 간 격차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활동에 대한 지역 간 격차가 이루어진다면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험의 차이가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결정에 차이를 낼 것이고 복지에 격차가 이루어진다면 재정적 지원, 사회적 지원의 차이가 똑같은 상황에서 A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은 어려움을 피해야겠지만 B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은 복지의 사각지대로 인해 어려움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담의 격차가 이루어진다면 한 청소년이라도 포기하지 말아야하는 상황에서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을 찾지 못해 비극적인 결말을 안겨 줄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원이 부족한 지자체에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지원해야하며 타 지자체보다 좋은 사례들이 많아 발전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상세한 사례분석을 전국적으로 공유해서 각 지역에 알맞게 적용을 시도해봐야 한다. 최소한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정책이 모든 지역에서 균등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이 좋은 지자체로 사람들이 진출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앞으로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은 현재 그렇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으로 작성하였다.)

활동참여에서 멀어지는 청소년을 붙잡아라.

대학입시에 대한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활동참여 경험이 인정되는 대학입시보다는 교과 성적에 집중된 대학입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활동보다는 학업성적 올리기에 급급해지는 상황으로 인해 청소년활동을 하는 청소년이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청소년이 자기 스스로 '내가 이 활동으로 어떤 발전을 이룩할 수 있지?'라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해, 정책은 변화의 속도가 빠른 청소년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고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한 예로, 청소년참여활동을 통해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사회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며, "야, 너도 할 수 있어."라는 자긍심을 심어준다면 청소년 참여활동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글은 교육부의 입시정책노선을 바꾸기보다는 청소년활동의 자구책을 마련해보자는 시각에서 작성하였다.)

권역별 통합 청소년참여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광역단위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기초단위 청소년참여위원회보다 모집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부분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기초단위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물론 광역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모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5~10년 동안 청소년의 인구는 자연 감소하며 입시로 인해서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광역권역을 기준으로 기초권역을 동부, 서부, 남부, 북부와 같이 지역위치로 나눠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비슷한 위치에 있는 지역은 소득과 학업의 수준이 비슷할 것이고, 지역별로 연합체의 형식으로 이뤄서 현재보다 더 넓은 지역의 대상으로 시야를 확장시킨다면 인원충원에도 부담이 적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참여도 상승과 더불어 충원된 인원 기반으로 정책교육 및 참여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참여활동을 진행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기획해도 괜찮다고 본다. (이 글은 어떻게든 청소년참여활동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지역 별 청소년정책을 한 곳에 볼 수 있는 청소년정책 아카이브가 필요하다.

지역 별 경제규모와 청소년의 인구를 고려해서 자신의 지역의 정책과 비교해볼 수 있는 청소년정책 아카이브가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의 정책참여나 지자체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타 지자체 정책진행사례를 살펴보기에도 효율적이며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관련학회에서 청소년정책을 발굴할 때에 여러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의 성격에 맞춰서 정책발굴을 하는데에도 유용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새로운 정책을 제안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좋은 사례의 정책을 참고해서 정책을 재구조화 해보는 경험도 청소년들이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청소년특별회의 윤선재 의장이 제작한 글(www.청소년정책위키.com))을 참고해서 작성하였다.)

패널토론 4

촘촘한 지원망 강화는 전문인력 확충과 공간, 재원 등 지원 기반 시스템 정비가 우선되어야

이 미 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회장)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패널토론 4

촘촘한 지원망 강화는 전문인력 확충과 공간, 자원 등 지원 기반 시스템 정비가 우선되어야

이미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회장)

7차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청소년 정책 환경변화는 청소년 인구의 지속감소와 위기청소년 증가로 나타남. 코로나 이후 아동·청소년 우울증 진료, 불안장애 진료가 증가, 청소년상담 1388을 통한 상담도 크게 증가함. 이는 청소년의 정책 환경이 정서·심리적 어려움에 크게 당면하고 있음을 보여줌. 지금까지 청소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 및 실효성 미흡 이유 중 하나로 인프라 정비 및 자원 확보 등 기반 미흡을 들 수 있음. 또한 복지영역의 과제로는 청소년의 위기단계 및 수준별 특성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망 구축과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지원공백 및 격차 해소가 요구됨. 이를 바탕으로 7차 기본계획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함

첫째, 청소년정책 방향성과 추진과제가 범부처 역할 및 연계·협력으로 보다 확대되고 포괄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임. 그동안 여성가족부 중심의 청소년 정책에서 범부처의 청소년 관련 영역과 역할 제시는 청소년정책의 다각적 지원과 체계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동시에 제시하며, 범부처간 긴밀한 협업으로 곧 국가의 책무가 강조된 것임

둘째,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과제 도출 및 청소년정책 추진의 종사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은 매우 고무적임. 특히 위기청소년 상담복지 지원의 상담복지센터 종사자와 청소년동반자 처우개선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위기에 전문 인프라 소실이라는 상담복지현장의 큰 위기를 반영한 것임. 다만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셋째, 청소년안전망은 복지사례관리로만 이해하는 청소년기본정책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음. 위기청소년지원은 청소년정책 중 복지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나 세부지원을 보면 심리·정서 측면의 상담을 기반으로 한 상담복지지원임. 따라서, 핵심지원인 ‘상담’을 전면에 내세워야 함. 위기청소년 지원현장은 심리·정서적 측면의 상담지원을 기반으로 여러 경제적 지원, 의료, 법률, 자립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이미 공적시스템 안의 사례관리 체계는 너무나 많음. 결국 대상자에게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현재로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밖에는 없는 상황임

넷째, 복지영역 중 촘촘한 청소년 지원망 강화의 세부 목표 중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및 시스템 고도화라는 분야를 살펴보고자 함. 청소년 복지지원 인프라 개편에서 지역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대의 전반적 기조는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 방법으로는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만들고 전담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를 두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 또한 지역사회 내 위기 청소년 대응체계 확립에 있어서 학교-교육청-지역 내 청소년센터(상담복지센터 등)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청소년 위기상황 시 신속 공동대응 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청소년안전망의 긴급대응 시스템 및 복지심의위원회의 기본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 그동안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에서 지금의 복지심의위원회를 기초로 위기 상황 시 긴급연계 및 대응하도록 모델을 만들어왔지만, 관계자들은 본인들의 영역에서만 긴급사안 매뉴얼로 처리하는데 그쳤기에, 그것을 안전망 운영위원회에 안전으로 올리거나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사안이었음.

이번 청소년 기본계획에 교육청 긴급대응 지침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연계기관으로 포함한다는 진전이 있지만, 여전히 연계 강화라는 체제로 나열하는 것이 과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긴급대응 시스템일지 의문임. 또한 기본계획안에 학교-교육청-지역 내 청소년센터(상담복지센터 등) 간 협업체계 구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긴급대응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로 되어있음. 이러한 모호한 표기가 긴급대응 시 역할 및 책임의 모호함으로 한계를 가짐. 이미 연계·협력 수준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긴급대응 시 역할분담과 의사결정하는 총괄 관리체계가 시급함. 지자체의 ‘청소년안전망팀’ 확대 속도는 현장의 위기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임. 따라서, 청소년안전망을 운영해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민이 절실함

다섯째, 신 소외청소년 지원체계 마련, 자살, 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 강화 그리고 위기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 체계 마련 등 개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현재 청소년 위기를 잘 반영한 정책으로 매우 적절하게 보여짐. 다행스럽게도 청소년상담복지현장에선 자살·자해, 심리적 외상 등 고위기청소년지원의 프로그램과 대응체계를 갖추고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기청소년 지원에 걸 맞는 시설확충과 전문 인프라 구축은 무척 미비한 수준임. 신 소외청소년대상 세심하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과 고위기 청소년 지원 등을 위한 전용공간과 전문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심리서비스에서 공간은 단순한 상담공간을 넘어선 청소년의 심리적 자리로서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아주 기초적이면서 근간이 되는 엄마의 품 같은 의미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0년에 독립공간 확보 미비와 고용불안정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그렇기에, 신 소외청소년 지원체계 마련이라는 새로운 정책에 앞서 지원 공간과 전문 인력 확보 등 제반 시스템 마련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함. 또한 고위기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에 임상심리사 신규배치 보다 위기전문상담사 배치가 더욱 필요함. 임상심리사의 역할은 심리측정을 통한 진단으로 위기청소년은 진단도 중요하지만 당장 고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것은 긴급대응과 전문적 심리 상담을 통한 심리적 회복임. 따라서 현장에서 더욱 시급한 것은 전문 역량을 갖춘 상담사임

여섯째, 지역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정책 사업 활성화에서 청소년성장망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지역별 네트워크, 마을교육(교육부)과 큰 차별이 없어 보임, 또한 청소년성장망에 제시된 지역의 여러 청소년 기관, 시설은 고유의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어 그 역할이 모호해지거나 중첩될 우려가 보이고 종사자들의 소진이 예상됨. 또한 청소년안전망과 흡사하여 혼선이 예상됨. 지역 청소년정책 사업은 별도의 기관이 아닌 기존의 청소년 기관, 시설에서 사업영역을 특화하여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운영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임

패널토론 5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희망

이 익 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의회 회장)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패널토론 5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희망

이익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의회 회장)

현재 우리 청소년들을 둘러싼 교육,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른바 위기 청소년의 증가가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방향도 설정해야 할 때이다. 이와 더불어서 청소년들이 현재를 즐기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장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활동의 욕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정책·사회 참여활동이 최근에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올바른 방향의 참여활동이 장려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청소년들을 짓누르고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적 요인들로 인해 육체적 정서적 건강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해결해야 할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청소년복지·보호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양한 활동기회를 확대하여 예방적 정책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비대면·디지털 활동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활동분야에서는 꼭 디지털로 전환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적어도 직접 만나본 청소년들은 비대면·디지털 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밖에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부딪치며, 뛰고 싶다고 한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소가 되어야 하는데, 비대면·디지털 활동은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이제는 점차 관심에서 멀어져가는 추세라고 청소년들은 말하고 있다. 분명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활동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느끼는 정보 부족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많은 지도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고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보제공 및 홍보문제를 해결하는데 청소년계가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앞서서 발표자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앞으로는 청소년정책은 발굴·보호 중심의 정책지원에서 청소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립까지 책임지는 종합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

만, 여기에서는 청소년활동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소년역량강화 및 성장지원(분야별 청소년활동 다변화, 청소년활동 연계 강화 및 공간혁신, 청소년활동의 재구조화) 방안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미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많은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이며, 특히 여성가족부에서는 장관님을 비롯하여 청소년활동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미 청소년활동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보여지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를 주고자 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인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변화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현재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두 가지 정도 첨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개편 및 기능 보완에 관한 사항이다. 그 동안 청소년계에서는 종합적인 청소년정보제공 체계 및 업무의 효율화 등의 이유로 e청소년 사이트를 개편하고 수정 보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해 왔다. 이는 수요자들의 요구와는 다른 차원의 홈페이지가 되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동안 이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홈페이지 개설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했으면 한다. 방향성을 분명히 정하지 못하고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만 한다면 기능이 복잡해지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기능들이 추가됨에 따라 홈페이지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개편하고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미리 정리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추가 설치에 관한 문제이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직원으로서는 매우 다행스럽고 반가운 이야기이지만 과연 기초지자체 단위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센터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내용이 광역시와 도는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한 점이다. 광역자치도의 경우에는 시설도 많이 있고, 지역적으로도 매우 넓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광역시의 경우에는 시설도 감당 못할 만큼 이용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역적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대전의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15개소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단체가 넉넉하게 잡아도 20개소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청소년단체협의회나 수련시설 협회에 센터가 참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데, 5개구에 센터가 생긴다고 하면 평균 시설 3개소가 단체 4~5개소 정도만 담당하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경기도와 강원도처럼 필요한 지역에 분소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오히려 정책전달체계에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각종 지침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중심 전달체계의 구심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셋째,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는 보수체계조사 및 표준보수체계 마련에서 그치지 않고 각 청소년시설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 보수체계가 마련되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매우 많기 때문에 반드시 표준보수체계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

패널토론 6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

조 아 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패널토론 6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조아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에 걸맞게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는 굳이 무엇인가를 덧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안에 덧붙이면 좋겠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써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첫째, 생애주기별 청소년정책도 제시되면 좋겠다.

주지하다시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의 연령을 포함하는 이질적인 집단이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연령집단을 포함하다 보니 이제까지 정책의 대상은 13~18세에 편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생애주기별로 청소년정책이 제시되면, 어느 단계의 정책이 미흡한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청소년정책의 균형을 잡기 용이하다. 또한 같은 정책이 연령대에 따라 연속적으로 시행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청소년안전망은 지역사회 연계의 대표적인 사례로 경찰서, 청소년 시설, 학교, 보건소, 검찰청 등 지역사회의 여러 관련 기관이 포함되어 있어서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지역사회를 둘러보면, 최근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관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관을 청소년안전망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안전망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의 청소년 시설에서는 이러한 기관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출범한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다. 자치경찰위원회와 연계를 강화하여 청소년 보호, 복지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의 업무는 생활안전, 교통·경비, 수사의 3개 분야인데, 이 중에서 생활안전의 아동·여성·청소년 등 보호, 수사의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은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치경찰 인권 보호 우수사례를 보면, “사회적 고립으로 생활고를 겪던 학생에게 손을 내밀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소년범에게 특별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으로 희망을 연결하다”처럼 자치경찰은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2022).

셋째, 청소년활동 역량지표 개선 시 관용을 포함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개발 6대 청소년활동 역량지표(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업, 창의력, 사회성, 진로개발역량)나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모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다. 반면 여기에서 제외되었지만 다른 역량을 발휘하기에 필요한 역량으로 관용(?)을 생각해보았다. 이것은 의사소통, 협업, 공동체 역량 등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기본적인 역량이다. 관용은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거나 대처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한 ‘2021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은 신체·외모(12.4%), 종교(11.5%), 국적·인종(11.0%), 장애(10.5%), 성별(10.3%)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혐오표현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2022). 이러저러한 이유로 혐오하고 차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공동체 역량을 키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청소년의 과학 분야 역량, 경제관련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반면 이에 못지않게 청소년들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넷째, 예비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을 향상시킨다.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1-2-1 학교-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청소년활동 강화」에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교과과정 연계 강화,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활동 중심의 융합형 교과과정 개발, 문제기반학습(Project Based Learning, PBL) 등을 활용한 청소년 주도활동 확대 등과 같이 기존의 양성과정에서 교육받지 못했던 업무를 청소년지도자들이 담당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는 청소년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지만 현재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이에 대한 준비가 아직은 미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이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4-1-2 청소년지도자 지원 및 전문성 제고에 포함되어 있다. 기존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연수를 통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지만 오히려 예비 청소년지도자들은 양성과정에서는 이러한 역량 개발의 기회가 없고 현장에 가서야 연수를 통해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예비 청소년지도자에 관한 내용이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들도 청소년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자는 자신만의 전문적인 영역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교사가 자신의 담당과목이 있듯이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지도자의 공통적인 영역과 자신만의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전문적인 영역의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울 뿐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도 해당 영역의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된다. 청소년정책에서는 예비청소년지도자들을 위한 정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2022). 2022 서울 자치경찰 으뜸 인권 보호 사례집.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a notebook or ledger. It features a series of horizontal ruling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A single vertical line runs parallel to the left edge, creating a narrow margin. The word "MEMO" is printed in a bold, sans-serif font in the upper right corner. The rest of the page is blank.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a notebook or ledger. It features a series of horizontal ruling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A single vertical line runs parallel to the left edge, creating a narrow margin. The word "MEMO" is printed in a bold, sans-serif font in the upper right corner. The rest of the page is blank.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a notebook or ledger. It features a series of horizontal ruling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A single vertical line runs parallel to the left edge, creating a narrow margin. The word "MEMO" is printed in a bold, sans-serif font in the upper right corner. The rest of the page is blank, ready for writing.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designed for writing. It features horizontal ruling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A single vertical margin line runs parallel to the left edge, creating a narrow column for notes or a header. The word "MEMO" is printed in a bold, black, sans-serif font in the upper right corner. The rest of the page is empty, ready for text.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인 쇄 2022년 12월 23일

발 행 2022년 12월 23일

발 행 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6/7층 (044)415-2114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전화 044) 868-353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